

공 개



의안번호	제 240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7. 8. (제 13 차)

의
결
사
항

(경기)안국저축은행 前 대표이사 ●●●의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7. 8.

1. 의결주문

(경기)안국저축은행 前 대표이사 ●●●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검사결과 조치 관련 (경기)안국저축은행 前 대표이사 ●●●의 이의 신청에 대해 조치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퇴임임원 등에 대한 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상당통보 할 수 없어 신청인에 대한 원조치를 변경할 이유가 있으므로 금융위원회 당해 처분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1월 상당) 통보”를 취소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이의신청 인용시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12차 제재심의위원회(2020.6.18.) 심의필

<별지>

(경기)안국저축은행 前 대표이사 ●●●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 前 대표이사 ●●●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직무정지 1월 상당)” 통보를 취소하고자 함

2. 조치사유

- ☐ 신청인의 이의신청 주장과 관련하여
 - 신청인에 대한 조치내용은 ◎◎동 토지 개발 1건에 대해서만 지적한 것으로 ㉠㉠리·●●리 토지 개발 2건에 대해서는 ○○○ ○○○ (XXXX.XX.XX.~XXXX.XX.XX.)에게 행위책임을 부과하였음
 -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재임하던 기간(XXXX.XX.XX.~XXXX.XX.XX.) 중 체결한 토지개발 계약서류 상 주택 및 음식점 부지조성, 도시가스관 및 상수도 공사 등을 추진한 것이 확인되고, 저축은행이 신청한 토지 개발행위 허가 심사과정에서 보완사항으로 수해방지 대책을 통보한 것으로 수해방지 복구만을 위한 불가피한 공사라고 볼 수 없음
 -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등 금융업관련법상 ‘제재시효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업 관련법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양정 기준에 따라 조치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음

□ 다만, 저축은행을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저축은행에게 통보(「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 이하 ‘상당통보’)할 수 있는 상당통보는 「상호저축은행법」 상 2010.3.22. 개정(2010.9.23.시행)시 도입되었으며

- 2010.3.22.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부칙상 동법 개정 전에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동 상당통보 조항(제35조의3 제1항)을 소급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퇴임 당시 「상호저축은행법」 상으로는 재직 중인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근거(제24조 제1항)만 있었을 뿐이므로 동법 개정 전에 퇴임('xx.xx.xx.)한 신청인에 대하여 퇴임 이후 법령을 적용하여 상당통보로 조치할 수는 없으므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1월 상당) 통보”를 취소하고자 함

관 계 법 규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업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신용계 업무
2. 신용부금 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4. 자금의 대출 업무
5. 어음의 할인 업무
6. 내·외국환 업무
7. 보호예수 업무
8.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9.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
10.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11.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
13.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및 신탁업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 금융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제24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제35조의3(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24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29조제1호·제3호·제4호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는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舊 「상호저축은행법」 (‘10.3.22. 개정시)

舊 제35조의3(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제35조제1항에 따라 제24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29조제1호·제3호의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24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29조제1호·제3호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는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법률 제10175호, 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2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舊 「상호저축은행법」 (‘10.3.22. 개정전)

舊 제24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 직무정지의 요구
4.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결손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된 경우
3.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营业을 한 경우
6.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별표 1]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4조제1항 관련)

17.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한 경우

□ 「상호저축은행법감독규정」

제2조(일반지침) 상호저축은행은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내에서 업무방법서가 정한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영위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5조(제재대상 위법·부당행위)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의 대상으로 한다.

1.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2.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3.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 또는 영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영악화를 초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의 이익을 해한 경우
4. 금융사고 등으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일으킨 경우
6. 감독자로서 감독을 태만히 한 경우
7. 기타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당·불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제14조(검사결과와 통보 및 조치) ④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금융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집행간부 포함)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장,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 또는 당해임원의 임면권자(임면제청권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임권고

-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자들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에서 정한 적기시정 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 바. 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 3. 문책 경고
 -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주의적 경고
 -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 5. 주의
 -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금융위가 금융기관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정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제24조의2(임원제재의 가중) ①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2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가장 중한 제재가 업무집행정지 이상인 경우
- 2.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 3.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②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주의적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도 다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여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 ③ 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문책경고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경고·주의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 ④ 임원제재의 가중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舊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15.9.14. 개정시)

舊 제24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가중) ① 금융기관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기관 중 제재를 더 많이 받았던 기관의 제재 기록을 기준으로 가중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2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장 중한 제재가 업무집행정지 이상인 경우
2.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④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주의적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도 다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여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⑤ 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문책경고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경고·주의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⑥ 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에 대한 제재의 가중 및 감면에 있어서는 제23조와 이 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해임권고·업무집행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는 각각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본다.

⑦ 직원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⑧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가중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2015-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 舊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15.9.14. 개정전)

舊 제24조(기관 및 임원제재의 가중) ① 금융기관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최근 3년 이내에 기관경고를 3회이상 받게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제재로 가중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이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최근 3년 이내에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관경고로 가중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2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장 중한 제재가 업무집행정지 이상인 경우
2.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④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주의적경고조치를 받고도 다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여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문책경고로 가중할 수 있다.

⑤ 임원이 문책경고 또는 2회이상의 주의적경고 조치를 받고도 3년내에 다시 주의적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⑥ 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에 대한 제재의 가중 및 감면에 있어서는 제23조와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해임권고·업무집행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는 각각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본다.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5. 자진신고,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3>의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제51조(기타 조치) 감독원장은 규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무방법개선의 요구
금융기관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하여 그 처리기준, 절차·운영 등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삭 제
3. 삭 제
4. 관련기관앞 통보
금융관련법규 이외의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검사결과 관련자가 진술일 현재 퇴직한 경우로서 관련기관 등의 업무 및 감독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사실 등을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4조(제재내용의 기록·유지) ① 금융기관은 임직원이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하여 제재 또는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위법·부당행위의 내용 및 제재·징계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고 이를 인사에 엄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위법·부당사실 등을 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퇴직한 직원의 징계대상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위법·부당사실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2>

제재양정기준

유형 \ 위법·부당의 정도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거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
법령, 관계규정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 처분, 지시등의 위반	해임권고(면직)	해임권고(면직)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	해임권고(면직) ~직무정지(정직)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당해 금융기관에 금전적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해임권고(면직)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당해금융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를 위반하거나 충실의무의 위반	"	"	"
직무태만	"	직무정지(정직) ~문책경고(감봉)	"
기타 위법	"	"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경기)안국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0. 5. 2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2,400만원 부과
임원	문책경고 1명 주의적경고 1명
직원	견책 2명 주의 2명

4. 제재대상사실

가.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경기)안국저축은행은

2016.3월말, 2016.12월말 및 2017.3월말에 다음과 같이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위험가중자산 산정오류 및 비업무용 유입 부동산에 대한 평가충당금 과소 계상 등으로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최소 1.11%p에서 최대 1.68%p 과대 산정하였음

(1) 2016.3월말, 2016.12월말 및 2017.3월말에 (주)□□□□□□□□ 등 81개 차주(대출금액 643억 61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최소 16억 91백만원, 최대 27억 53백만원 과소 적립하였음

* 경매 등 법적절차 진행중인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부당분류(고정→정상) 및 부실징후(3년연속 결손 등)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요주의→정상)

(2) 2016.12월말 및 2017.3월말 결산시 비업무용부동산(40건, 장부금액 220억 82백만원)에 대한 평가충당금 12억 64백만원을 각각 과소 적립하였음

(3) 2016.3월말 결산시 수익증권 25억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잘못 적용(정당 100% → 부당 30%)하여 위험가중자산을 17억 50백만원 과소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6

나. 대출 부당 취급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소요자금 규모, 미래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신용리스크를 평가하는 등 종합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는데도,

(경기)안국저축은행은

2013.4.30.~2016.3.15. 기간 중 (주)㉠㉠ 등 7개 차주에 대하여 일반 자금대출 등 8건, 70억 6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심사를 소홀히 하여 다음과 같이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2018.3.31. 현재 17억 31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① 2014.12.23.~2016.3.15. 기간 중 (주)㉠㉠ 등 4개 차주에 대하여 경락자금대출 등 5건, 44억 2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사업계획서 징구 또는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하지 않았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법사가가 경매유찰 등에 따라 하락하였음을 알면서도 경매개시시점의 최초법사가 또는 공시지가 등을 기초로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등 심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10억 40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② 2013.4.30.~2015.9.2. 기간 중 개인사업자 ㉡㉡㉡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경락자금대출 등 20억 5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아닌 제3자의 과거 재무제표로 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였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임대차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차주가 허위로 작성·제출한 선순위 임차보증금 채무(23억원 70백만원)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심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3억 88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③ 2015.4.8. 개인사업자 ㉢㉢㉢에 대하여 부동산매입자금대출 5억 9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1순위로 설정한 담보물의 감정평가액은 3억 50백만원이며, 2순위로 설정한 담보물은 유효담보가액이 1억 87백만원으로 담보여력이 부족한데도, 추가적인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3억 3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舊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2016.7.28. 개정전의 것)」 제11조의6

다. 부동산개발 등 미인가업무 영위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예금, 대출 등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정한 업무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는데도,

(경기)안국저축은행은

2006.6.27.~2015.4.8. 기간 중 보유중인 경기도 소재 유입부동산 3곳을 주택용지 등으로 개발*하여 이를 제3자에게 분양(매각)**하는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영위하였음

* 동 기간 중 해당 지자체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신축신고 등 인허가를 받았으며, 개발업자 등에게 토목공사 대금 등으로 36억 51백만원 지급

** 총 60억 23백만원에 유입한 부동산을 127억 33백만원에 분양(매각)하여 30억 59백만원 차익실현

부동산개발 명세

개발부동산 소재지	개발기간	부동산 개발 내용
경기도 ○○동 산○○○번지 외 2필지	2006.6.27~2014.1.17.	전원주택용지로 개발 후 필지 분할하여 분양
경기도 □□읍 □□리 산□□□번지 외 1필지	2007.11.22.~2015.4.8.	다가구주택용지로 개발 후 매각
경기도 ●●●면 ●●●리 산 ●●●●-●●●번지 외 7필지	2008.2.1.~2014.9.5.	전원주택용지로 개발 후 필지 분할하여 분양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라. 비업무용부동산 부당 취득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데도,

(경기)안국저축은행은

2010.12.15. 경기도 소재 부동산(◆◆시 ◇◇리 000-0,-0 토지, 취득 금액 1억 24백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음

* 보유중인 비업무용부동산(◆◆시 ◇◇리 산000-00외 7필 지) 개발을 위한 도로확보 목적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마.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동 보안대책에는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경기)안국저축은행은

2014.11.29.~2016.6.13. 기간 중 신용정보처리업무와 무관한 ㉠㉠부 소속 직원 3명에게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였음

<관련규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2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8조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 등

사.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 舊「상호저축은행법」(2016.7.28. 개정 전의 것) 제22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에게 예금의 수입 및 대출 등의 업무와 그 부수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경기)안국저축은행은

2015.10.1.~2016.6.20. 기간 중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채권관리업무 등을 겸직토록 하였음

< 관련규정 >

1. 舊「상호저축은행법(2016.7.28. 개정전의 것)」 제22조의3
2. 舊「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2016.7.28. 개정전의 것)」 제12조의2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중소금융과	감독총괄국
연 락 처	02-2100-2993	02-3145-8291